민주 "난방비 긴급 추경·특검·탄핵"… 역공 총력전

김건희 이상민

"정부, 쥐꼬리 처방… 생색내기
의총서 이상민 탄핵 논의할 것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투쟁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지원 긴급 추경편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꺼내들며 대여 역공 총력전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쥐꼬리 처방"으로 규정하며 긴급 추경편성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를 더해 긴급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 대책"이라며 "지금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의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추진과 난방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등 국민 고통 경감시킬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2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이젠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 추진은 2일 임시국회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주무 장관은 즉각 사의를 표명하는 게 너무나 마땅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회법에 그 절차가 규정돼 있는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상기하면서, 내부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 비중이 "과반"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 필요성도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다.

그는 향후 특검 추진 방안에 대해,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새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연다.

규탄 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민생 파탄, 검사독재 정권 문제 두 부분을 집중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독선과 무능으로 인해 민생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병훈 "사감위에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 부여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1일 불법 홀덤펍 등 유사 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형석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1일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처럼 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진선미 "근로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15배 받는다"

근로 소득자 상위 20%의 소득이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득은 2021년 98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소득은 65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15.1배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보다 몇 배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즉 상위 20%인 근로자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15.1배 많다는 의미다.

전체 근로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2017년 3518만9831원에서 2018년 3646만7477원, 2019년 3743만5216원, 2020년 3828만1768원에 이어 2021년 처음 4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김선욱 기자

"총선 이대론 안된다"… 비명계 '민주당의 길' 토론회

86세대 역할 재조정 등 대안 제시
지역 송갑석·서삼석·서동용 참여
李 "다양한 목소리 듣는 게 역할"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의 길'이 지난달 31일 출범과 동시에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인영·홍영표(4선),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 의원 등 참석자 20여명의 대다수가 비명계로 분류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해온 인사들이다. 광주에서는 송갑석 전 광주시당위원장, 전남에서는 서삼석·서동용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명모임이 아닌 비전모임이다"라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정치전략·미래전략·민생개혁 등 비전 얘기를 많이 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당 지도부다. 이 대표가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일각의 당내 시선을 경계했다.

이원욱 의원도 "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대선과 지선 이후 반성과 혁신 모임 시즌1, 시즌2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냐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모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민주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당이 안정돼있고 단결돼있는 때가 없었는데,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일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들면서 당 지지도도 30% 초반대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호남에서의 지지도 안심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이 당 지지도를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됐다.

김종민 의원은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반사이익만으로 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지원 "호남 중심 민주주의 확산 필요"

'대한민국… 호남의 역할' 특강
"李 수사 전, 민생 안정시켜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기 전에 민생부터 안정시키라"고 날을 세웠다.(사진)

박 전 원장은 1일 오후 광주 동구 민주의집에서 특강 '대한민국 미래와 호남의 역할'을 열어 "검찰은 몇 년 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하다가 느닷없이 성남FC 사건을 살핀다며 이 대표를 불러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들여 조사했으나 (오히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사라졌다"며 "검찰은 뇌물 수수 정황 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인을 잡아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윤 정부는 이 대표를 잡아 들일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살피라"고 꼬집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배상 방법인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 한·일 양국의 합치된 사안으로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강의 말미에는 광주가 중심이 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국으로 퍼트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광주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담은 정신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며 "광주와 호남이 살아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 '행동하는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초청강연을 다니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해나 기자